

환경부, 무책임한 답변으로 빈축!

HB마크 인증 안받아도 그만 ... 건축자재 생산기업 “모르는 소리”

환경부가 개최한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페인트, 벽지 등 건축자재 생산기업 관계자들은 HB마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으나 환경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4월13일 환경부가 마련한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및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는 여러 중소 페인트, 벽지, 바닥재 생산기업들이 참여해 환경마크제도와 HB마크제도의 중복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 페인트 생산기업 관계자는 “현재 삼성건설, LG건설 등 1군 건설기업에서 3군 건설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HB마크를 인증받지 않으면 건축자재 납품을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신한벽지 관계자도 “1군 건설기업이 법적 강제력도 없는 HB마크를 받지 않으면 건축자재 납품을 거절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태이고 기존의 환경마크를 받은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재현 환경경제과장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HB마크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인증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며 인증여부는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환경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자재 생산기업 관계자들은 “환경부는 실정도 모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며 “한국공기청정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인데 회원사인 건설기업의 횡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금강고려화학(KCC) 품질경영팀의 조용석 차장은 “친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환경관련 인증제를 통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HB마크 인증에 대한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시행되는 품목별 환경마크 인증 등급제도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희 기자>

<화학저널 2004/04/16>